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변금선*

최근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증가와 근로능력자를 수급대상으로 확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자의 노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1998년과 2003년의 노동패널데이터로 이중차이모델(Difference in Difference)을 이용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동시장 수요변수가 근로능력자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영향은 교육수준, 성별, 배우자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중퇴이하인 근로능력자는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이상인 근로능력자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후 근로시간이 약 1.5시간 감소하며, 저교육의 기준을 고등학교 중퇴이하가 아닌 고등학교 졸업이하로 설정했을 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효과가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자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그 효과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집행 상 문제와 조건부급여라는 특성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I. 들어가는 글

1. 연구배경 및 연구문제

공공부조제도의 근로유인 문제는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이슈이다. 최근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증가와 근로능력자를 수급대상으로 확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은 공공부조제도가 수급자의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연구의 방향과 변수의 한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자의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해왔다.

기존 연구들은 빈곤이행요인으로서의 노동이나 노동을 결정짓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초기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 첫째, 빈곤이행요인으로서의 경제활동여부와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경제활동이 빈곤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며, 빈곤층의 성격변화로 인해 경제활동의 여부뿐 아니라 경제활동의 질 역시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수료

중요한 빈곤이행요인으로 작용함을 증명한다(이원익 1999; 노대명 외 2002; 임세희 2003).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빈곤의 원인으로 노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노동을 결정짓는 요인을 간과하고 있어서 빈곤층의 노동행태가 어떠한 원인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둘째, 노동행태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기존의 주요 빈곤집단이었던 여성 및 노인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하거나(여지영 1995; 금재호 2000; 양후영 2001; 이정원 2001),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노동시장 공급변수를 중심으로 연구해 왔다(김철희: 2002, 안종범 외: 2002). 이러한 연구들은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으나, 연구대상의 한계로 빈곤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근로능력자의 경제활동을 설명하지 못하며, 근로능력자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시장 수요측면 변수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제도의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초기적인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다. 유경준, 김대일(2002)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계비 지원을 받는 수혜가구들의 노동공급이 감소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실제 수급자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근로를 조건으로 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상은(2004)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추정하였으나, 노동시장 수요변수와 집단 및 시기에 따른 상호작용의 영향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빈곤이행요인을 살펴보거나, 노동행태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다라도 변수구성과 접근방법의 한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제도가 근로능력자의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해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자의 경제활동, 즉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되, 기존연구에서 다루지 않아왔던 노동시장 수요변수를 통제변수로 추가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Schoeni and Blank(2000)가 사용하고, 국내에서는 이상은(2004)이 이용한 이중차이모형을 이용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개인의 경제활동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공부조제도변수와 더불어 근로능력자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시장의 공급과 수요의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우선 첫째,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공급측면의 변수들은 개인의 인적자본과 가계 내

1) 개인의 경제활동은 고용조건(임금, 보상수준, 근로조건) 및 고용수준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Ehrenberg & Smith, 2003). Bowen & Finegane(1969)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적인 변수를 개인적 특성과 노동시장의 조건으로 구분하였는데, 개인적 특성은 결혼 상태, 인종, 교육수준, 기타소득, 연령 등을 포함하고, 노동시장의 조건은 지역노동시장의 실업률, 연구대상의 취업 기회를 반영하는 산업혼합 변수, 그리고 지역노동시장에서의 연구대상자가 종사하는 직종의 평균 임금을 포함한다. 개인적 특성의 경우는 노동시장 공급자 특성 변수이며, 노동시장 조건은 노동시장 수요측면의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에서의 노동공급에 대한 공동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가족구조를 포함한다(McKernan & Raciliffe, 2002). 즉, 노동자 개인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 내의 지위, 가족구성원 내의 근로능력자와 자녀의 수에 따라 경제활동 특성이 결정된다.

성별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남성의 노동공급 탄력성이 여성보다 낮기 때문이다. 여성의 근로시간은 남성에 비해 적으며(Bowen & Finegan, 1969), 항상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비해 미취업 할 가능성이 높다(김철희, 2002). 연령 또한 경제활동의 차이를 보이는 주요한 변수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청장년층의 경우보다 노년층의 경우 경제활동에 종사할 확률이 낮아지고 근로시간이 감소한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특성 및 경제활동 상태 변화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연령이 높을수록 실업에서 취업으로 이행하는 비중은 감소한다(Bowen & Finegan :1969 김철희 :2002).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이 크고,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에 종사한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기대임금이 높아지므로 여가보다는 노동을 선호하기 때문이다(Bowen & Finegan, 1969). 취업과 실직사이의 고용불안정 역시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여성에 집중되어 있는데 직업간 그리고 고용-실직 사이의 이동은 교육이 낮은 여성일수록 이동 확률이 높으며, 교육이 높은 여성은 남성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Royalty, 1998).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저학력일수록 실업에서 취업으로 이행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미취업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김철희, 2002).

가구주보다는 배우자의 경우 가구주의 근로상태에 따라 부가노동자로서의 역할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가구주일수록 노동공급이 증대되며, 배우자일수록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특히 기혼여성 과 여성 가구주의 노동공급을 비교한 연구에서 가구 내 지위는 경제활동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Schoni & Blank, :2000 Kaushal & Kaestner: 2001). 가구 내 근로능력자수와 아동수가 많을수록 가구전체의 근로시간이 줄어든다. 김철희(2002)에 의하면, 가족구성원수와 취업자 수가 많을수록 실업상태에 놓여있을 확률이 크다. 이는 가족구성원의 노동활동으로 가족수입이 증가함으로 인해 여가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자녀수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수 증가의 노동공급 감소효과는 아동의 보육에 의한 결과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연령으로 자녀수를 제한할 경우 자녀수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자녀수의 증가는 교육관련 비용 지출 증대로 추가소득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즉,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이 노동의 기회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져 자녀수 증가가 근로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기혼여성에게 미취학아동의 증가는 가사노동증대로 인한 경제활동참여 가능성의 감소와 부양가족 증대로 인한 추가소득이 필요해 짐을 의미한다(이정원, 2001).

둘째, 노동공급은 노동자 개인이 속한 노동시장의 수요에 영향을 받는다. 개인이 노동을 선택한다 해도, 일자리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다. 수요의 결핍이 공급의 특성을 압도할 경우 자격과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실업과 빈민의 대열에 남겨놓게 되는 것이다(Schiller, 2001)²⁾. 노동수요의 변동은 노

2) 연구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시킬 경우 노동시장 수요변수는 더욱 부각된다. 노동특성이 저숙련,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정의되는 저소득층은 경기침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경기침체 시 고용 및 임금상승과 직위상승 등에 있어서 다른 노동계층에 비해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Levitan & Shapiro, 1987).

동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얼마나 있는가를 보여주는 실업률과 노동수요와 공급수준의 균형에 따라 변화하는 임금으로 측정할 수 있다(Bowen & Finegane, 1969). 우선 실업률은 개인이 속하는 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별 실업률, 교육수준별 실업률, 그리고 종사산업별 실업률로 나뉜다.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현재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높은 실업률은 개인이 취업할 가능성과 근로시간을 감소시킨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산업발전에 따른 경제의 재구조화와 숙련 노동자의 수요증대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문제는 교육수준과 종사산업에 따른 실업률에 반영되며, 이는 빈곤층의 경제활동에 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Harry & Robert, 1999). 한편 개인의 노동행위는 임금과 긴밀히 연결되는데 임금의 증대는 개인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을 의미하는 임금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된다. 노동시장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경우 임금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즉, 임금수준이 증대된다는 것은 일자리 수가 일하려는 사람의 수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에 개인이 취업할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그리고 임금이 높을수록 대체효과가 커지므로 여가보다는 노동을 선택하게 되어, 임금 증대가 노동공급을 증대시킨다. 즉, 임금이 감소할 경우, 노동공급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³⁾. 1980년대 미국의 저숙련자 경제활동 참여율 감소는 임금감소에 의한 노동공급 감소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Blank, 1997).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주로 살펴볼 공공부조제도는 현금급여의 보장액과 근로소득공제율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예산제약선을 변화시켜 공공부조 수급 가능 계층의 노동과 여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은 실제로 받는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동시에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예산제약선을 만든다. 개개인은 여가와 근로에 대한 선호에 따라 예산제약선 위에 조금씩 다른 무차별곡선을 그려서 근로와 여가의 조합을 선택하는데, 복지프로그램은 이들의 예산제약선에 변화를 줌으로서 개인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Ehrenberg & Smith, 2003). 실제로 노동공급에 대한 경제학적 모형에 따르면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근로시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예측한다. 여가가 정상재(normal good)라고 가정할 때 공공부조제도의 보장액은 비근로소득을 증가시켜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소득효과를 발생시킨다. 공공부조의 급여감소를 역시 근로소득의 크기를 변화시켜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효과를 발생시키고,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변화시켜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대체효과를 일으켜 노동시간을 변화시킨다(Moffit, 1992).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법 하에서 급여대상이 아니었던 근로능력자를 수급가능 대상으로 확대시켰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자의 노동공급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이론적 추측을 가능하게 만든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에도 급여를 지급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의 복지의존과 근로유인을 저하시켜 공공부조제도가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

3) 임금상승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및 개인이 노동과 여가에 대한 선호를 동시에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임금상승이 총소득 증대로 이어져 개인의 여가에 대한 선호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종사산업평균임금의 경우, 개인의 실질 임금을 의미하기 보다는 개인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의 평균임금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종사산업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게 한다.

지금까지 살펴봤듯, 근로능력자의 경제활동은 노동시장 공급자 특성변수, 노동시장 수요변수, 그리고 공공부조제도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 특성을 설명할 종속변수로 취업 여부와 근로시간을,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독립변수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설정할 것이다. 통제변수는 노동시장 공급자 특성변수인 성, 연령, 교육수준 등의 인적자본변수와 가구 내 지위, 가구 내 근로능력자 및 자녀수로 표현되는 가구변수,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 제외되었던 노동시장 수요변수인 연구대상자의 지역별 실업률과 종사 직종의 평균임금으로 설정 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이중차이모델에서 집단 및 시기의 구분

본 연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전국적 정책의 효과 평가에 있어서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중차이 모델(difference in difference model)을 사용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를 시행 이전과 이후 변수를 이용해 측정 할 경우, 제도 시행 전후의 차이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제 3의 경제요인이나 기타 제도의 변화 때문인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 3의 경제요인과 기타 제도 변화에 의한 영향을 통제할 수 있는 이중차이모델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중차이모델은 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정책에 의해 주요한 영향을 받는 집단인 프로그램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인 비교집단을 구분해 정책 전후의 효과를 비교한다(Blank & Schoeni, 2000). 즉, 이중차이 분석을 이용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프로그램 집단과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비교집단을 나누는 기준과 제도 시행전후를 구분하는 실험시기를 설정해야 한다.

본 연구의 이중차이 분석에서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은 교육수준, 성별, 그리고 가구 내 지위이며, 기준에 따라 교육모형, 성별모형, 배우자모형으로 나뉜다.

우선 첫째, 교육모형의 연구대상은 교육수준이 낮은 근로능력자와 교육수준이 높은 근로능력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집단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다. “근로능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명시하는 근로능력을 기준으로 연구대상을 설정 할 수 있으나, “저소득”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할 때 내생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연구대상 설정 기준으로 사용되는 “소득”이 종속변수인 경제활동과 근로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득이 아닌 교육수준을 사용 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설정할 것이다. 교육수준이 고졸이상인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경우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설정한다⁴⁾.

4)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 “교육”은 저소득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Eissa & Liebman(1996)는 EITC가 편모의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

둘째, 성별모형의 연구 대상은 교육수준이 낮은 남성 및 여성이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동공급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노동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여성은 가구주보다는 배우자인 경우가 많아서 남성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현금급여 서비스에 의한 노동공급 변화에 민감하다. 또한 여성은 일반적으로 가사나 아동양육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여성의 노동공급은 남성에 비해 실질 임금율과 실질 한계세율에 민감하다⁵⁾.

세 번째 모형은 여성의 가구 내 지위 기준에 따른 배우자모형이다.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가구 내 지위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여성 배우자의 경우에는 가구주인 경우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이정원, 2001). 여성배우자는 일을 할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지만, 여성가구주의 경우 일을 하더라도 수급여부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성배우자가 여성가구주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즉, 여성배우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노동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며, 여성가구주는 기존의 노동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시기더미 변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실험 시기는 연구결과에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중차이모델에서 실험 시기는 비교집단과 프로그램 집단간의 비교분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나, 1999년부터 한시보호제도 등을 통해 근로능력자에 대한 급여가 부분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999년 이전인 1998년을 시행 이전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이 개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정책 시행이후 일정시간이 지나야 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를 반영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이후의 시점을 2003년으로 설정한다.

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동과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나누었으며, Schoni & Blank(2000)는 Welfare waiver를 대상으로 한 복지개혁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교육수준과 지역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저소득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적자본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 저소득층의 특성을 조사할 경우 일반계층보다 교육수준이 낮게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저교육을 고등학교 중퇴 이하로 설정하였는데, 연구대상의 주된 연령층인 중장년층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가 저교육층을 반영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수준을 집단 설정기준으로 한 다른 연구들에서도 고등학교 졸업자를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구분하였다.

- 5)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여가와 노동에 있어서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여성의 경우가 더 크다고 알려져 있다. 즉, 임금변화 등에 의해 노동공급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는 여성이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일 경우에 해당되는 논리이다.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대한 논의는 세 번째 모형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

2. 단순이중차이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실험집단과 영향을 받지 않을 비교집단을 선정해 제도의 실시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측정, 비교하므로 패널데이터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단순이중차이는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 이전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 이후의 각 집단의 근로시간의 차를 구하고 다시, 그 차의 차를 구함으로써 이중차이를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이중비교를 할 경우 모든 집단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제 3의 경제적 요인과 기타 제도적 변화에 의한 영향을 차단할 수 있다.

다음 <그림 1>은 단순 이중차이 분석의 원리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1] 단순이중차이 모델

비교집단	Q_1	실험	Q_2
프로그램집단	Q'_1		Q'_2

- 비교집단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전후 비교 = $Q_1 - Q_2$
- 프로그램 집단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전후 비교 = $Q'_1 - Q'_2$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 효과 = $(Q'_1 - Q'_2) - (Q_1 - Q_2)$

3. 이중차이분석 회귀모형

앞에서 살펴본 단순이중차이는 제 3의 경제요인 및 기타 제도의 영향을 차단할 수 있으나, 개인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변수를 통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이중차이 회귀모형이 요구된다. 다음은 이중차이 분석을 위한 회귀모형이다.

$$W_i = X_i\beta + \alpha + \text{집단더미}_i \delta_1 + \text{시기더미}_i \delta_2 + \text{집단더미}_i * \text{시기더미}_i \delta_3 + \epsilon_{ij}$$

위 회귀식에서 W_i 는 종속변수인 경제활동 참여여부와 노동시간을 의미한다. 경제활동 참여여부의 경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게 되며, 노동시간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한다. β 는 개인적인 특성과 노동시장 수요의 영향을 통제하는 vector로 성별, 연령, 15세 미만 자녀수, 가구 내 근로능력자수, 지역별 실업률, 종사산업평균임금 등이 포함된다. 종속변수는 시기더미, 집단더미, 그리고 상호작용항으로 나뉜다. 시기더미는 1998년을 제도 시행 이전으로, 2003년을 제도 시행이후로 설정한다. 집단더미는 각 모형의 집단구분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교육모형은 고등학교 중퇴를 기준으로 설

정된다. 회귀식에서 집단더미와 시기더미의 상호작용항은 시기의 영향이 집단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프로그램 집단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다.

우선 첫째, 기본모형의 연구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의 만성장애가 없는 근로능력자이다. 기본모형은 이중차이 분석을 위해 투입되는 집단더미변수와 상호작용항을 제외한 것으로 앞에서 정리한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변수가 통제변수로 투입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여부를 반영하는 시기더미 변수가 독립변수로 투입된다. 기본모형을 통해 이중차이모델에서 나타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를 보다 명확히 분석할 수 있다. 종속변수가 취업여부인 경우에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며, 근로시간인 경우에는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한다.

둘째, 교육모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며, 연구대상은 근로능력자로 기본모형의 연구대상과 일치한다. 비교집단을 고졸이상의 교육수준이 높은 근로능력자로, 프로그램집단을 고교 중퇴 이하의 교육수준이 낮은 근로능력자로 설정한다.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각각의 전후 차이를 비교할 경우, 전후 차이의 결과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것인지, 경제 환경 변화와 같은 기타 변수에 의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 3의 경제요인과 같은 기타변수의 영향이 각 집단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때, 각 집단의 전후차이의 차이, 즉 이중차이를 알아봄으로서 기타변수의 영향을 통제할 수 있다. 즉, 기타변수의 영향은 같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될 가능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했을 때, 저교육 집단과 고교육 집단의 공통적 변화는 제 3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고교육 집단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저교육 집단에서만 발견되는 변화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항은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와 제도이후의 상호작용항으로 δ_3 의 값이다⁶⁾. δ_3 는 시기더미의 영향이 교육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항으로 이중차이의 존재여부를 보여준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후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의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 대한 상대적인 노동공급 변화를 측정한다. 즉, δ_3 은 시기더미의 영향이 교육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여부를 보여준다. 만약, 기타변수가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공통되게 영향을 미치고, 기초보장제도의 노동공급 영향이 저교육 집단에 강하게 나타난다고 가정했을 때, δ_3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줄 것이다. 즉, δ_3 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저교육 집단의 노동공급이 고교육 집단의 노동공급에 비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냄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교육 집단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집단특성에 있어서 상대적인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개인적 공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이중차이 추정에서의 표집편차를 줄이게 해 준다.

셋째, 성별모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이 있는 저교육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

6) 상호작용이란 독립변수 A의 값이 독립변수 B에 따라 다른 종속변수의 값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A와 B가 상호작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Lewis-beck,1980), 이중차이 분석에서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는 제도가 프로그램집단에 끼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값이다.

을 보여주며, 연구대상은 근로능력이 있고, 교육수준이 낮은 자로 비교집단을 남성으로 프로그램집단을 여성으로 설정한다. δ_3 는 시기더미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여부를 보여준다. 만약, 기타변수가 성별에 관계없이 공통되게 영향을 미치고, 기초보장제도의 노동공급 영향이 여성에게 강하게 나타난다고 가정했을 때, δ_3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줄 것이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이후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 있어서 여성의 노동공급이 남성의 노동공급에 비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모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이 있는 저교육 여성배우자의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며, 연구대상은 근로능력이 있고,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이다. 비교집단은 여성가장이며, 프로그램집단은 여성배우자이다. δ_3 는 시기더미의 영향이 배우자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여부를 보여준다. 만약, 기타변수가 배우자여부에 관계없이 공통되게 영향을 미치고, 기초보장제도의 노동공급 효과가 여성배우자에게 강하게 나타난다고 가정했을 때, δ_3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날 것이다. 즉, δ_3 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배우자의 노동공급이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가장의 노동공급에 비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냄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여성배우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4. 분석자료

가. 자료 구성

본 연구의 원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데이터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로서 1998년부터 2003년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대상은 1998년과 2003년의 데이터 중 15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의 경제활동 가능인구로 근로능력의 여부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능력 판정지침에 준거해, 장애나 심각한 만성질환이 없는 집단으로 선정한다.

나. 변수의 설정

우선 종속변수인 경제활동여부는 취업여부로 측정했다. 노동패널데이터에서는 미취업자를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일거리나 직장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경우, 또는 가족이나 친지가 사업주인 사업체에서 평소 일주일에 18시간미만으로 일을 도운 경우로 정의한다. 취업자인 경우 1, 미취업자인 경우 0으로 코딩된다. 한편, 근로시간은 유급으로 근무하는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의미하며, 미취업자의 근로시간은 0이다.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정상근로시간과 평

근로시간 그리고 초과근로시간의 합으로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산출하고, 비임금근로자는 주당 평균근로시간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시기더미 변수, 집단구분 변수, 상호작용변수로 나뉘는데 우선, 시기더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여부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시행이전 값인 1998년 데이터와 2003년 데이터이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수는 1998년의 경우 0의 값을, 2003년의 경우는 1의 값을 갖는다. 둘째, 집단구분변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프로그램 집단과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비교집단의 구분을 위한 더미변수이다. 교육모형의 경우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저교육이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고교육이 0으로 코딩되며, 성별모형의 경우 여성이 1, 남성이 0으로 코딩된다. 마지막으로 배우자모형은 배우자가 1, 가구주인 경우 0의 값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변수는 프로그램 집단 여부와 제도 시행여부의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후 프로그램 집단과 비교집단의 상대적인 차이를 측정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 효과를 보여준다.

III. 분석결과

1. 분석 자료의 일반적 특성

기술통계를 이용해 분석 자료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경제활동상태와 취업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기술통계치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경제활동상태, 주당 평균근로시간 기술통계

		기본-교육모형			성별모형			배우자모형		
		사례수	빈도	퍼센트	사례수	빈도	퍼센트	사례수	빈도	퍼센트
취업여부	취업	19,333	10903	56.4	7903	4097	51.8	4004	2030	50.7
	미취업		8430	43.6		3806	48.2		1974	49.3
근로시간 (취업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30.36	30.56		26.91	32.14		28.26	32.60	

자료 : 한국노동패널 1차, 6차 조사.

표본 :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의 만성질환 및 장애가 없는 근로능력자 개인 19333명.

기본모형과 교육모형의 연구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자이며, 성별모형의 연구대상은 교육수준이 고졸중퇴 이하인 교육수준이 낮은 근로능력자이다. 배우자모형의 연구대상은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 배우자와 여성가구주이다. 즉, 각 모형은 근로능력자, 저교육 근로능력자, 저교육 여성근로능력자의 특성을 반영한다.

우선 취업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능력자, 교육수준이 낮은 근로능력자,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근로능력자의 순서로 취업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과 2003년의

근로능력자 19,333사례를 분석한 교육모형의 경우 취업자는 56.4%로 10903 사례인 것에 비해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별모형은 교육수준이 낮은 근로능력자 7,903사례 중 51.8%인 4,097 사례만이 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연구대상을 한정시킬 때 취업자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모형에서 취업자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경우는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별모형이었는데, 이는 교육 수준이 낮고, 여성일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낮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반영한다.

근로시간의 경우는 취업여부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근로능력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 근로능력자,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은 근로능력자가 그 뒤를 이었다. 근로능력자 전체의 평균 근로시간은 30.36시간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성별모형의 평균근로시간인 26.91시간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 근로능력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8.26 시간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근로능력자 전체의 근로시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나 남성에 비해 임금이 낮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총소득을 획득하기 위해 여가보다는 노동에 투자하는 시간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이론을 반영한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의 기술통계치를 통해 경제활동, 즉 취업 및 미취업과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개인의 기본적인 특성과 소속된 노동시장의 특성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성별은 교육수준모형에서는 남성이 49.1%를 차지하지만,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연구대상을 한정시킨 성별모형에서는 남성이 35.1%에 불과해 남성이 여성보다 교육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사산업평균임금은 교육수준이 낮은 성별모형의 값이 전체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수준모형의 값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높아진다는 인적자본이론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근로능력이 있는 저교육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배우자모형의 값은 성별모형의 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비율은 교육수준모형과 성별모형에서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배우자모형의 경우 가구주보다 배우자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가구 내 지위가 배우자라는 것을 반영한다.

2. 변수 간 단순상관관계

가. 종속변수와 독립, 통제변수와의 상관관계

10개의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중 9개의 변수가 $p < .01$ 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여부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가구주여부였다($r = 0.419, p < 0.01$). 이는 가구주 여부와 취업여부가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가구주일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배우자여부와는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r = -0.154, p < 0.01$). 가구주는 가구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배우자이거나 기타 가구원인은 가구주에 비해 생계유지에 대한 부담이 작기 때문에 취업여부와 상관관계 방향성이 반대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가구 내 지위와 경제활동 상태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가구주여부에 이어 취업여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성별이었다. 남성을 기준으로 한 성별이 취업여부와 가지는 상관관계는 $r=0.253$ 으로 $p<0.01$ 의 수준에서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연령이 많을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연구대상이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심신장애가 없는 생산가능인구임이 반영된 결과이다. 교육수준은 $r=-0.005$ 의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수요변수인 지역별 실업률과 종사산업 평균임금은 $P<0.01$ 수준에서 각각 $r=-0.092$ 와 $r=0.157$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지역별 실업률은 낮은 수준이지만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높은 실업률은 노동시장 수요부족을 의미해 개인의 취업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종사산업 평균임금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제도의 영향을 나타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여부 시기더미와 취업여부의 상관관계는 $P<0.01$ 수준에서 $r=0.09$ 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자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연구가설과 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단순상관관계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변수의 관계 정도를 나타내므로 추후 통계적 통제를 이용한 통계분석에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근로시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10개의 독립, 통제변수 모두 $p<0.01$ 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변수의 상관관계가 취업여부의 결과와 일치했다. 그러나 교육수준과 종사산업평균임금의 결과는 취업여부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교육수준은 근로시간과 $P<0.01$ 수준에서 부적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근로시간의 부적관계는 교육수준과 종사산업평균임금의 정적인 관계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봤듯, 교육수준과 종사산업임금의 상관관계는 $P<0.01$ 수준에서 $r=0.269$ 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근로자는 교육수준이 낮은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노동에 대한 기회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노동보다는 여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보여준다. 종사산업 평균임금은 $P<0.01$ 수준에서 $r=-0.027$ 의 부적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 취업여부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즉, 종사산업평균임금의 경우에는 임금이 높아질 때 취업할 가능성은 증가하고, 근로시간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정도는 매우 낮았다⁷⁾.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남성일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가구주 일수록, 가구 내 근로능력자 수가 적을수록, 가구 내 자녀수가 많을수록, 지역 실업률이 낮을수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취업가능성과 근로시간이 증가한다. 그리고 종사산업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취업할 가능성은 증가하고, 근로시간은 줄어들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이 감소한다.

7) 이러한 결과는 높은 임금이 노동과 여가의 선택에 있어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동시에 일으켜 노동공급을 감소와 증가 효과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개인의 노동공급에 대한 기존 이론을 반영 한다. 임금의 증가는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을 증가시켜서 노동에 대한 선호를 높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총 소득을 증가시켜 여가를 선호하게 만든다(Ehrenberg and Smith, 2003).

나.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간의 상관관계

다음으로 독립, 통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다.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종속변수와 상관관계보다 월등히 높을 경우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변수들 간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제도 시기더미와 지역별 실업률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기더미와 지역실업률은 $P < .01$ 수준에서 $r = -0.845$ 로 매우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이전인 1998년은 1997년 IMF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이후인 2003년은 IMF 구조조정 이후 5년이 지난 뒤여서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기더미와 지역별 실업률의 높은 상관관계는 이들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과학 연구에서 다중공선성은 정도의 문제로 완벽히 제거할 수 없는 부분이다⁸⁾. 그 외 변수의 결과를 정리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이후 교육수준과 연령은 높아지고, 근로능력자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남성일수록 교육수준은 높고, 가구주일 가능성이 높아지며, 종사산업평균임금도 증가한다.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은 낮고, 가구주일 가능성이 높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종사산업평균임금이 높다.

3. 단순이중차이

단순이중차이 분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프로그램집단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비교집단의 전후차이를 구한 뒤, 프로그램집단과 비교집단 각각의 전후차이의 차이를 다시 한번 구함으로써 집단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 3의 경제요인 및 기타 제도의 변화를 통제할 수 있다.

우선 첫째, <표 2>는 교육모형의 단순이중차이를 보여준다. 프로그램 집단은 근로능력자 중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교육수준을 갖고 있는 저교육자이고, 비교집단은 근로능력자 중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수준을 갖는 고교육자이다. 저교육 근로능력자와 고교육 근로능력자의 제도 시행 전후차이의 차이인 취업률의 이중차이는 약 5%로 저교육 집단이 고교육 집단에 비해 제도시행 이후에 취업률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집단비교를 통해 집단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 3의 경제변수 및 제도의 영향 등을 통제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교육 근로능력자의 취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근로능력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이중차이는 3.489시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후 근로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시간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기존 이론 및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상은(2004)은 근로능력자수와 교육수준에 따른 단순이중차이 분석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8) 통계분석 시 scoring method를 이용해 다중공선성 유무를 확인 해본 결과, 모든 모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기더미와 지역실업률은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의 취업률은 0.02% 증가하고, 근로시간이 평균 0.2시간 감소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취업률의 결과는 본 연구와 일치하지만 근로시간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연구결과와의 차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후차이를 구분하는 시기의 문제와 집단 선정 기준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된다⁹⁾.

<표 2> 교육모형 단순이중차이

	프로그램/비교집단	1998	2003	차이
취업여부 (취업률)	저교육	0.439 (0.007)	0.547 (0.009)	0.106
	고교육	0.580 (0.006)	0.634 (0.005)	0.054
	집단간의 차이	-0.141	-0.067 이중차이	0.052
근로시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저교육	25.015 (0.474)	29.775 (0.567)	4.760
	고교육	31.577 (0.389)	32.848 (0.322)	1.271
	집단간의 차이	-6.562	-2.073 이중차이	3.489

자료 : 한국노동패널 1차, 6차 조사.

표본 :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의 만성질환 및 장애가 없는 근로능력자 개인 19333명.

() 안의 값은 SE 이다.

둘째, <표 3>은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근로능력자만을 대상으로 여성을 프로그램 집단으로, 남성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했을 때의 단순이중차이 분석을 정리한 것이다.

저교육 여성 집단과 저교육 남성 집단의 제도 시행 전후 취업률의 이중차이는 -0.065로 여성 프로그램 집단의 취업률이 남성에게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후 6.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교육모형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로 성별이라는 기준이 추가될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여성의 노동공급 탄력성이 남성보다 크다는 기존 이론을 반영한다. 다음으로 근로시간의 이중차이는 -2.275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이 여성 저교육자의 근로시간을 약 2

9) 본 연구는 1998년과 1999년을 제도시행 이전으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를 제도시행 이후로 구분한 이상은(2004)의 연구와는 달리, 실험시기에 있어서 제도 시행에 의한 영향을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1998년을 제도시행 이전으로, 2003년을 제도시행 이후로 구분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가구 내 근로능력자수를 통제하지 않고, 교육수준 및 기타 기준을 도입해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시간 감소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설명하는 보충소득제도가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Danziger, 1981).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영향을 더욱 민감하게 반응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프로그램집단인 저교육 여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노동공급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표 3> 성별모형 단순이중차이

	프로그램/비교집단	1998	2003	차이
취업여부 (취업률)	저교육 여성	0.40 (0.009)	0.475 (0.012)	0.075
	저교육 남성	0.511 (0.012)	0.651 (0.013)	0.140
	집단간의 차이	-0.111	-0.176 이중차이	-0.065
근로시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저교육 여성	22.494 (0.569)	25.935 (0.728)	3.441
	저교육 남성	29.651 (0.817)	35.367 (0.858)	5.716
	집단간의 차이	-7.157	-9.432 이중차이	-2.275

자료 : 한국노동패널 1차, 6차 조사.

표본 : 교육모형 표본 중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중퇴이하인 7903명.

() 안의 값은 SE 이다.

마지막으로 <표 4>는 연구대상을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 가구주와 여성 배우자로 한정시키고, 프로그램 집단을 여성배우자로, 비교집단을 여성가구주로 설정한 배우자모형의 단순이중차이를 정리한 것이다. 우선 취업률의 단순이중차이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배우자와 여성가구주의 취업률 이중차이는 약 12%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여성 배우자의 취업률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여성 배우자가 여성 가구주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해 노동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근로시간에 대한 이중차이 역시 취업률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 근로시간의 이중차이는 약 5.245 시간으로 나타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 배우자의 근로시간이 여성가구주의 근로시간에 비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는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 배우자의 근로시간에 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교육수준이 낮은 근로능력자의 취업률과 주

당 평균근로시간을 증가시키지만,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의 취업률과 평균근로시간을 감소시키고,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 배우자의 취업률과 평균근로시간을 증가시킨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자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며, 영향의 방향은 교육수준, 성별 그리고 가구 내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이중차이 분석은 개인의 특성과 노동시장의 수요와 같은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하므로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변수들을 통계적으로 통제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집단과 비교집단을 비교할 수 있는 이중차이 회귀모형이 요구된다.

<표 4> 배우자모형 단순이중차이

	프로그램/비교집단	1998	2003	차이
취업여부 (취업률)	여성 배우자	0.460 (0.011)	0.545 (0.014)	0.085
	여성 가구주	0.632 (0.030)	0.594 (0.030)	-0.038
	집단간의 차이	-0.172	-0.049 이중차이	0.123
근로시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여성배우자	26.165 (0.711)	29.813 (0.895)	3.648
	여성 가구주	33.971 (1.942)	32.374 (2.075)	-1.597
	집단간의 차이	-7.806	-2.561 이중차이	5.245

자료 : 한국노동패널 1차, 6차 조사.

표본 : 교육모형 표본 중 교육수준이 중퇴이하이고, 여성인 가구주 및 배우자 4004명.

() 안의 값은 SE 이다.

4. 이중차이분석

이중차이 회귀분석은 개인의 특성 차이를 반영하는 노동시장 공급변수와 노동시장 수요측면의 영향을 반영하는 수요변수, 그리고 제 3의 경제요인과 같은 전후 차이에 대한 상황적 요인을 통제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 효과를 명확하게 측정한다.

가. 취업효과

<표 7>은 각 모형의 취업효과에 대한 이중차이 분석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통제변수인 근로능력자의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노동시장 수요변수와 공급변수는 성별모형의 연령과 15세미만 자녀수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능력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본모형과 교육모형의 경우, 남성일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모형에서 가구주일수록, 근로능력자가 많을수록, 지역별 실업률이 낮을수록, 종사산업평균임금이 높을수록 취업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이론과 일치했다.

지역별 실업률과 종사산업평균임금은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아왔던 노동시장 수요측면의 변수이다. 본 연구를 통해 노동시장 수요 변수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모형에서 지역별 실업률과 종사산업평균임금은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배우자모형에서 지역별실업률의 회귀계수는 -0.147 로 취업률과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dd ratio는 0.837 로 실업률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취업률은 약 3% 감소한다. 이는 실업률 상승이 일자리의 부족을 의미해 개인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는 기존 노동시장이론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종사산업평균임금의 회귀계수는 0.003 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서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서 임금이 높을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기존 이론과 일치하지만, 임금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15세 미만 자녀수는 기본모형, 교육모형, 성별모형에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취업할 확률은 증가하고, 배우자모형에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취업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모형, 교육모형, 성별모형에서는 자녀수가 근로능력자의 노동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해, 여성과 남성을 모두 포함하는 모형에서는 아동양육에 의한 노동공급 감소효과가 추가 소득 증대의 필요성에 의한 노동공급 증가 효과보다 작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연구대상을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가구주와 배우자로 제한한 배우자모형에서는 15세미만 자녀수가 많을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1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아동양육에 의한 노동공급 감소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¹⁰⁾.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이중차이 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과 이후를 나타내는 시기더미 변수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시기더미 변수는 근로능력자 전체가 연구대상인 기본모형과 교육수준 모형,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 연구대상인 성별모형,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가구주와 배우자가 연구대상인 배우자 모형 모두에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취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능력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된 이후에 취업할 확률은 미취업할 확률의 0.568 배이며, 교육수준이 낮은 근로능력자가 취업할 확률은 미취업 할 확률의 0.501 배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후 근로능력자와 교육수준이 낮은 근로능력자의 취업률이 감소된 것으로

10) 자녀수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결과는 자녀의 연령을 몇 세 이하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이상은(2004)의 연구에서는 6세 이하의 자녀수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결과 취업여부와 근로시간에 모두에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가구주와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취업할 확률은 미취업 할 확률의 0.316배로 다른 모형보다 취업할 확률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기더미는 연구대상으로 설정된 근로능력자, 교육수준이 낮은 근로능력자,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가구주와 배우자의 취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¹¹⁾.

둘째, 프로그램 집단과 비교집단 여부를 나타내는 집단더미변수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집단과 비교집단을 구분하는 각 모형의 더미변수가 갖는 회귀계수는 모두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취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교육과 고교육을 구분하는 교육모형 더미변수의 odd ratio는 0.595로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취업할 확률이 미취업 할 확률의 0.595배이다. 여성 여부로 프로그램 집단과 비교집단을 구분하는 성별모형 더미변수의 odd ratio는 0.602로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은 취업할 확률이 미취업 할 확률의 0.602배에 불과해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인 경우 취업률이 낮다. 배우자 여부를 보여주는 배우자 모형의 더미변수의 odd ratio는 0.445로 세 모형 중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배우자인 경우 취업할 확률이 미취업 할 확률의 0.445배여서 집단 구분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중차이 분석에서 집단간 차이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가 높은 경우보다 취업률이 낮고, 남성보다 여성의 취업률이 낮으며, 여성배우자가 여성가구주보다 취업률이 낮다는 기존 이론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프로그램집단에 미치는 노동공급 효과를 나타내는 상호작용 변수의 결과를 알아보면, 상호작용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근로능력자의 노동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이 검증되지 않았다¹²⁾.

<표 5> 취업효과 이중차이분석

11) 이상은(2004)의 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기더미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대상을 교육이라는 단일기준으로 설정하고, 이중차이를 나타내는 상호작용효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2)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이하를 저교육으로 설정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배우자의 노동공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부록1> 참고).

	변수명	기본모형			교육모형			성별모형			배우자모형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통제 변수	성별 1)	0.444 (0.058)	1.559***		0.453 (0.059)	1.573***		-	-		-	-	
	연령	0.012 (0.002)	1.012***		0.013 (0.002)	1.013***		-0.002 (0.004)	0.998		-0.029 (0.006)	0.972***	
	교육수준	-0.131 (0.019)	0.877***		-0.269 (0.024)	0.764***		-0.443 (0.048)	0.642***		-0.438 (0.059)	0.645 ***	
	가구주여부	1.873 (0.079)	6.507***		1.825 (0.079)	6.202***		2.429 (0.141)	11.352***		-	-	
	배우자여부	0.573 (0.075)	1.774***		0.590 (0.075)	1.804***		1.850 (0.136)	6.361***		-	-	
	근로능력자수	0.061 (0.020)	1.063***		0.071 (0.020)	1.074***		0.060 (0.028)	1.062**		0.068 (0.037)	1.071*	
	15세미만 자녀수	0.075 (0.025)	1.078***		0.086 (0.025)	1.090***		0.045 (0.039)	1.046		-0.111 (0.053)	0.895**	
	지역 실업률	-0.113 (0.014)	0.893***		-0.114 (0.014)	0.893***		-0.160 (0.020)	0.852***		-0.178 (0.025)	0.837***	
	종사산업임금	0.002 (0.000)	1.002***		0.002 (0.000)	1.002***		0.003 (0.000)	1.003***		0.003 (0.000)	1.003***	
이중 차이 변수	시기더미	-0.547 (0.077)	0.579***		-0.566 (0.085)	0.568***		-0.690 (0.160)	0.501***		-1.152 (0.258)	0.316***	
	집단더미				-0.520 (0.070)	0.595**		-0.507 (0.116)	0.602***		-0.809 (0.162)	0.445***	
	시기 집단 상호작용				-0.074 (0.092)	0.928		-0.235 (0.156)	0.790		0.318 (0.252)	1.375	
	constant	-1.265 (0.224)	0.282***		-0.436 (0.272)	0.647*		-0.949 (0.542)	0.387*		2585 (0.742)	13.268***	
모델 적합성	Model Chi-square	Chi-square	df	Sig.	Chi-square	df	Sig.	Chi-square	df	Sig.	Chi-square	df	Sig.
		11613.635	10	.000	11688.633	12	.000	3845.652	11	.000	1243.555	9	.000

자료 : 한국노동패널 1차, 6차 조사.

표본 :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의 만성질환 및 장애가 없는 근로능력자 개인 19333명.

집단더미 : 교육모형 - 고등학교 중퇴 이하 =1, 고등학교 졸업이상=0(기준변수 : 고등학교 중퇴)

성별모형 - 여성=1, 남성=0

배우자모형 - 배우자=1, 가구주=0

***=p<.01, **=P<.05, *=P<.10

나. 근로시간효과

다음 <표 6>은 근로시간에 대한 영향의 이중차이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우선 통제변수인 근로능력자의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노동시장 수요변수와 공급변수가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취업에 대한 결과와 일치했다. 남성일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가구주일수록, 근로능력자가 많을수록 근로시간이 증가하며, 교육수준이 높고, 지역별 실업률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자의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이중차이 변수들의 결과를 살펴보겠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과 이후를 나타내는 시기더미가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면, 시기더미 변수는 네 모형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능력자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기본모형과 교육모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회귀계수는 -3.685와 -3.481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취업에 대한 영향과 일치하며, 회귀계수의 절대값이 감소해 교육수준 더미와 상호작용항의 투입으로 시기더미 변수가 갖는 영향력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모형과 배우자모형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회귀계수는 각각 -7.386과 -12.159로 제도 시행 이후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능력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후 근로시간이 3.481시간 감소해 교육수준이 낮은 근로능력자가 7.386시간 감소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 가구주와 배우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후 주당 근로시간이 12.159시간 감소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여성의 근로시간 변화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를 시행 전후차이만으로 측정된 것이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효과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

둘째, 각 모형의 프로그램 집단과 비교집단 여부를 알려주는 집단 더미변수의 근로시간에 대한 영향은 다음과 같았다. 집단 더미변수도 모든 모형에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교육자일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일수록, 여성 가구주보다는 배우자일수록 근로시간이 감소한다. 이는 단순상관관계에서 나타났던 근로시간과 교육, 근로시간과 배우자 여부의 부적인 상관관계와 일치하며, 단순이중차이에서 나타났던 각 시점의 집단간 차이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교육모형에서 고등학교 중퇴 이하와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되는 더미변수의 회귀계수는 -4.288로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근로시간이 약 4시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에 대한 영향과 일치하는 결과로 성별모형과 배우자모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성별모형과 배우자모형의 집단더미변수의 회귀계수는 각각 -4.155와 -7.420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 비해 근로시간이 4시간 감소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배우자가 여성가구주에 비해 근로시간이 약 7시간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프로그램 집단을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배우자로 설정할 경우 프로그램 집단과 비교집단의 여부가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을 의미한다. 즉, 집단을 선정하는 기준이 추가될 경우 프로그램 집단과 비교집단간의 근로시간 격차가 커진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 근로능력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시기더미변수와 집단더미변수의 상호작용항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성별모형과 배우자모형의 상호작용항은 취업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모형은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자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나 여성으로 연구대상을 한정시켰을 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이중차이분석 및 연구가설의 예측과 일치하지 않는다¹³⁾. 교육모형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는 프로그램 집단으로 선정된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과 시기더미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며, 근로시간에 있어서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과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의 이중차이의 존재여부를 보여준다. 회귀계수는 -1.513으로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즉,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근로시간이 약 1.5시간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제 3의 경제요인과 기타 제도의 영향이 근로능력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저소득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부조제도가 수급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Schoeni and Blank; 2000 유경준, 김대일; 2002).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프로그램 집단의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상호작용항은 교육모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교육수준이 높은 비교집단보다 교육수준이 낮은 프로그램 집단의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은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근로시간이 감소한다. 교육모형의 결과는 단순이중차이의 분석결과와 상반되는데, 이는 각 집단의 공급자 특성변수와 노동시장 수요변수가 통제 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교육 근로능력자의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반영하는 집단으로 설정된 근로능력이 있는 저교육자의 노동공급에는 부적인 영향을,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배우자의 노동공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¹⁴⁾.

13) 유경준, 김대일(2002)에 의하면 생계비 지원을 받는 수혜가구 중 여성들은 주당 근로시간이 1.8-3.5 시간 감소한다. 즉, 저소득 여성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상반된다. 그러나 유경준, 김대일(2002)의 연구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함으로써 실제 수혜가구에 대한 노동공급 추정에 있어서 한계를 지니고, 수급자라 해도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주당 18시간 이상의 근로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 감소효과를 과대 추정했을 가능성이 크다(이상은, 2004).

14)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이하를 저교육으로 설정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과 여성배우자의 근로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인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후 근로시간이 약 1.6시간 증가하며,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인 여성배우자는 여성가구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후 근로시간이 약 3.6시간 증가한다(<부록2> 참고).

<표 6> 근로시간 이중차이분석

	변수명	기본모형		교육모형		성별모형		배우자모형	
		B	se	B	se	B	se	B	se
통제변수	성별 ¹⁾	4.830***	0.494	4.875***	0.493	-	-	-	-
	연령	0.090***	0.020	0.092***	0.020	-0.070*	0.039	-0.338***	0.072
	교육수준	-1.859***	0.150	-3.094***	0.199	-4.401***	0.490	-4.872***	0.698
	가구주여부	14.579***	0.666	14.137***	0.666	21.350***	1.336	-	-
	배우자여부	4.459***	0.650	4.359***	0.650	14.697***	1.201	-	-
	근로능력자수	0.558***	0.168	0.659***	0.168	1.109***	0.280	1.348***	0.445
	15세미만 자녀수	0.607***	0.205	0.692***	0.205	0.060	0.371	-1.435**	0.615
지역 실업률	지역 실업률	-0.758***	0.122	-0.751***	0.121	-1.324***	0.198	-1.986***	0.307
	중사산업 평균임금	0.002***	0.001	-0.002***	0.001	0.006***	0.002	-0.006**	0.003
이중차이 변수	시기더미	-3.685***	0.654	-3.481***	0.710	-7.386***	1.415	-12.159***	3.018
	집단더미			-4.288***	0.589	-4.155***	1.030	-7.420***	2.003
	시기 집단 상호작용			-1.513**	0.744	0.369	1.350	3.089	2.916
	constant	43.053***	1.868	50.418***	2.022	48.630***	2.885	90.882***	7.308
통계량	N	19333		19333		7903		4004	
	R-Square	0.395		0.398		0.352		0.234	
	F-value	1148.472***		984.383***		326.726***		109.568***	

자료 : 한국노동패널 1차, 6차 조사.

표본 :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의 만성질환 및 장애가 없는 근로능력자 개인 19333명.

집단더미 : 교육모형 - 고등학교 중퇴 이하 =1, 고등학교 졸업이상=0(기준변수 : 고등학교 중퇴)

성별모형 - 여성=1, 남성=0

배우자모형 - 배우자=1, 가구주=0

***=p<.01, **=P<.05, *=P<.10

I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동공급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노동시장 수요변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으며, 이중차이모형을 사용해 근로능력자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변수를 통제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근로능력자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시장 수요, 노동시장 공급변수, 그리고 기타 제도 및 시간효과를 통제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첫째, 본 연구를 통해 노동시장 수요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에서는 확인할 수 없던 부분으로 분석결과, 지역별 실업률과 중사산업 평균임금은 근로능력자의 취

업과 근로시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구대상에 따라 방향성은 차이가 나지만, 근로능력자의 노동공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교육수준이 낮은 근로능력자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근로능력자는 빈곤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영향으로 노동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이론적인 예측과 부분적으로 일치했다. 교육수준이 낮은 근로능력자는 교육수준이 높은 근로능력자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후 근로시간이 약 1.5시간 감소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자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연구가설이 검증되었다. 하지만 그 영향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교육수준이 낮은 근로능력자의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이상은(2004)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노동시장 수요변수와 공급변수를 모두 통제된 상태에서 프로그램 집단과 제도의 상호작용항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 효과를 보다 명확히 추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과 여성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성별모형과 배우자모형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즉, 근로능력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근로능력자와 교육수준이 높은 근로능력자를 비교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 효과가 확인되었지만, 연구대상을 교육수준과 성별을 기준으로 제한한 상황에서는 성별과 가구 내 지위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저교육의 기준을 고등학교 중퇴이하가 아닌 고등학교 졸업이하로 설정했을 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배우자의 취업과 교육수준이 낮은 근로능력자의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저교육의 정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배우자가 여성가구주에 비해 노동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이론적인 예측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연구대상을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근로능력자로 제한한 상황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여성가구주보다는 여성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노동공급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저교육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로 설정 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기 보다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의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 효과가 근로능력자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성별모형과 배우자모형 그리고 저교육의 기준을 고등학교 졸업이하로 설정했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 효과가 이론적 예측과 다르게 나타난 것은 몇 가지 이유를 근거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집행 상 문제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행정적인 능력이 미비한 상태에서 소득조사를 실시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가 미비하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실질적으로는 이론상 예측되는 노동공급 감소효과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조건부과제도의 영향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자에게는 18시간 이상의 근로활동을 요구하

는 조건부급여제도이다. 이론적으로는 남성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노동공급 감소가 클 것이라고 예측되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조건부과 대상일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노동활동을 해야 하므로 취업률과 근로시간에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 즉, 조건부과제도에 의해 전통적 공공부조제도의 노동공급에 대한 부적인 영향이 차단되거나, 여성에 한해서 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엄밀한 이론적 검토와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데이터와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한계를 갖는다. 첫째, 노동패널데이터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놓여진 지역의 근로능력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 효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이중차이모델을 이용한 연구가 지닌 한계이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의 경제적, 제도적 변화가 프로그램집단과 비교집단 모두에게 동일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각 집단에 따라 다른 영향을 끼치는 경제적, 제도적 변화가 발생했을 때,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대안적 방법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근로능력자의 노동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자의 노동유인을 감소시킬 수도, 그리고 증가시킬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자의 근로유인을 감소시켜,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리고 수급자 개인의 장기적 복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자에게도 현금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건부급여이기 때문에 수급자의 노동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다. 즉, 조건부급여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적 특성을 활용한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는 노동공급 감소효과를 차단하고, 노동공급 증대효과의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 효과에서 알 수 있듯,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근로능력뿐만 아니라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개인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원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부록 1>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취업효과

	변수명	교육수준 모형			성별모형			배우자모형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통제변수	성별	0.460 (0.059)	1.584***	-	-	-	-	-	-	-
	연령	0.010 (0.003)	1.011***	0.005 (0.003)	1.005*	-0.009 (0.005)	0.991**			
	교육수준	-0.211 (0.030)	0.810***	-0.232 (0.035)	0.793***	-0.453 (0.047)	0.636**			
	가구주여부	1.911 (0.080)	1.859***	1.930 (0.095)	6.891***	-	-			
	배우자여부	0.620 (0.076)	1.066***	0.797 (0.089)	2.219***	-	-			
	근로능력자수	0.064 (0.020)	1.066***	0.093 (0.022)	1.097***	0.115 (0.034)	1.112**			
	15세미만 자녀수	0.079 (0.025)	1.082***	0.045 (0.029)	1.046	-0.101 (0.044)	0.904**			
	지역 실업률	-0.111 (0.014)	0.895***	-0.146 (0.002)	0.864***	-0.168 (0.023)	0.846***			
중사산업임금	0.002 (0.000)	1.002***	0.002 (0.000)	1.002	0.003 (0.000)	1.003***				
이중차이 변수	시기더미	-0.441 (0.101)	0.643***	-0.798 (0.113)	0.450***	-1.198 (0.225)	0.302***			
	집단더미	-0.226 (0.089)	0.798**	-0.495 (0.080)	0.610***	-1.047 (0.139)	0.351***			
	시기 집단 상호작용	-0.129 (0.094)	0.879	0.029 (0.107)	1.029	0.404 (0.215)	1.498*			
	constant	-0.644 (0.317)	0.525***	-0.925 (0.373)	0.396***	1.342 (0.596)	3.827***			
모델 적합성	Model Chi-square	Chi-square	df	Sig.	Chi-square	df	Sig.	Chi-square	df	Sig.
		11627.927	12	.000	7321.371	11	.000	2678.748	9	.000

자료 : 한국노동패널 1차, 6차 조사.

표본 :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의 만성질환 및 장애가 없는 근로능력자 개인 19333명.

집단더미 : 교육모형 - 고등학교 중퇴 이하 =1, 고등학교 졸업이상=0(기준변수 : 고등학교 중퇴)

성별모형 - 여성=1, 남성=0

배우자모형 - 배우자=1, 가구주=0

***=p<.01, **=P<.05, *=P<.10

<부록 2>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근로시간 효과

	변수명	교육수준 모형		성별모형		배우자모형	
		B	se	B	se	B	se
통제변수	성별	4.987***	0.496	-	-	-	-
	연령	0.072***	0.021	0.037	0.027	-0.102**	0.046
	교육수준	-2.659***	0.254	-2.442***	0.326	-4.452***	0.475
	가구주여부	14.913***	0.671	16.672***	0.883	-	-
	배우자여부	4.878***	0.658	6.866***	0.883	-	-
	근로능력자수	0.581***	0.168	0.884	0.209	1.489***	0.345
	15세미만 자녀수	0.635***	0.205	0.377***	0.262	-0.980**	0.426
	지역 실업률	-0.737***	0.122	-1.065***	0.150	-1.693***	0.242
중사산업 평균임금	-0.002***	0.001	-0.008***	0.001	-0.004***	0.002	
이중차이 변수	시기더미	-2.683***	0.821	-6.897***	0.989	-11.468***	2.260
	집단더미	-2.033***	0.760	-5.368***	0.764	-9.121***	1.492
	시기 집단 상호작용	-1.299*	0.740	1.624*	0.914	3.637*	2.128
	constant	48.971***	2.471	48.630***	2.885	80.902***	4.748
	N	19333		13227		5606	
	R-Square	0.396		0.366		0.307	
	F-value	974.093***		636.211***		247.867***	

자료: 한국노동패널 1차, 6차 조사.

표본: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의 만성질환 및 장애가 없는 근로능력자 개인 19333명.

집단더미: 교육모형 - 고등학교 중퇴 이하 =1, 고등학교 졸업이상=0(기준변수: 고등학교 중퇴)

성별모형 - 여성=1, 남성=0

배우자모형 - 배우자=1, 가구주=0

***=p<.01, **=P<.05, *=P<.10

참고문헌

- 구인회(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한국사회복지학』 48호. 서울: 한국사회복지학회. 83-122.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 『사회복지연구회』.
- 김두섭, 강남준(2000), 『회귀분석』, 서울: 나남.
- 금재호(2002). 「일과 빈곤」. 한국노동연구원
- 김철희(2002). 「저소득층의 특성 및 경제활동 상태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안중범 외(2002). 「빈곤과 실업의 원인과 복지정책의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 양후영(2001). 「고령자의 경제활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OECD국가들의 노동시장적 요인과 사회적 정책 요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지영(1995), 「도시저소득층 기혼여성의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경준, 김대일(2002).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구조 변화와 재분배정책의 효과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이상은(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 효과」, 한국 노동패널조사 제 5차 세미나.
- 이원익(1999). 「빈곤지속기간과 빈곤탈피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원(2001). 「저소득 모자가정 가구주의 취업형태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세희(2004). 「빈곤탈출의 결정요인-경제활동 특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대명 외(2003) 「2002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정책보고서 2003-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Ehrenberg and Smith(2003). 『노동경제학』, 서울 : 교보문고.
- Schiller (2001). *The Economics of Poverty and Discrimination*.
- Bowen and Finegane(1969). *The economic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anziger, Haveman, Plonick(1981), “How income transfer program affect work, savings, and the income distribution: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19, No.3(Sep), 975-1028.
- Eissa & Liebman(1996), “Labor supply response to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the Quaterly Journal of Economy*, Vol. 111, No. 2(May), 605-637.
- Harry & Robert(1999). “Job change and job stability among less-skilled young worker”. IRP discussion paper no 1191-99.
- Harrison(1978), “How American households mix work and welfare”, *Challenge* 21: 49-54.

- MDRC.(구인회(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 사회복지연구. 31에서 재인용)
- Kausal and Kaestner(2001), “From welfare to work: Has welfare reform worked?”.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Vol 20, No 4, 699-719.
- Levy(1979), “The labor supply of female heads, or AFDC work incentives don't work too well”.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14, No, 1(Winter), 27-97.
- Lewis-beck(1980), *Applied Regression*. Sage University Paper. London.
- Moffit(1992). “Incentive effects of the U. S. welfare system”.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XXX(March 1992), pp 1-61.
- Royalty(1998). “Job to job and job to unemployment turnover by gender and education”.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16, No2(Apr, 1998), 392-443.
- Schoeni and Blank(2000). “What has welfare reform accomplished?: Impacts on welfare participation, employment, income, poverty, and family structure”.(NBER working paper 7627). Cambridge, M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